

“광주형 일자리, 바닥 향한 미친 질주”

광주형 일자리 중단·전면 재검토 기자회견 ... “아무도 시도 않는 신규 소형 화석연료 자동차 공장”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가 한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완성차지부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자본, 일부 노동계의 아합이 만든 ‘반노동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지부는 5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과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재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반쪽짜리 일자리”라며 “지금은 자동차 산업 전환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노동권·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 공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권력과 자본의 필요에 따라 양보하고 제한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 과정 배제된 사실을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광대늘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정세 이전에 설계한 엉터리 광주형 일자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제인 정부는 고용보장 약속 없는 기간산업 고용안정 기금을 만든다고 한다. 일자리 정책 제대로 만들라”



라고 요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은 광주형 일자리가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을 보장한다고 떠들지만, 노동권 없는 반값 임금 일자리다. 언제까지 반값 임금 따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권력과 자본의 시각에서 만든 일자리”라고 규탄했다.

“광주형 자동차 공장, 차 산업 죽인다”

금속노조 완성차 지부장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명확히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수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현재 국내 경차와 소형 SUV 판매 시장 규모는 12만 대 수준이다. 광주에 추가로 10만대 경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 한국지엠 창원과 현대차 울산 기아차 위탁 생산 동희오토 서산

지역에서 오히려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꼬집었다.

이상수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한국 자동차 산업 안에서 무한 경쟁과 공급자 사이 제 살 깎기 경쟁을 일으켜 자동차 산업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최종태 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 창출 방식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며 “일자리는 신규 산업과 사회 일자리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바닥을 향한 미친 질주”라고 일갈했다. 최종태 지부장은 “제조업 동일업종 업체 끼리 쥐는 도미노 경영 위기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반대를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성갑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소형·승용차를 포기하고 중대형·SUV 제작·공급으로 전환한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성갑 지부장은 “문제인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주장하더니, 뜬금없이 광주에서 화석연료 소형차를 만들겠다는 모순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문제인 정부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중심 어린 충고를 무시한다면 광주시민에게 광주형 일자리는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을 알리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코로나 19 악용 구조조정 저지하자”

금속 경남 교섭위원 실천대회 열어 ... “두산중 휴업 불법, 사천항공산단 노동자 생계위협”

코로나 19 경제위기가 노동자 생존권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월 21일 교섭위원 실천대회를 열었다.

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코로나 19 경제위기 악용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교섭위원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지청에서 경남도청까지 행진을 벌였다. 지회 교섭위원들과 21일부터 휴업에 돌입한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지난 2월부터 강제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5월 21일부터 1960년부터 1962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일방 선정해 휴업을 지시했다. 사무직들도 증명되지 않은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휴업 대상자는 생산직 조합원 246명, 사무직은 111명이다.

이성배 노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박 씨 오너 일가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과 미래에 대한 사측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부당하고, 불법이다”라고 못 박았다.

“두산중 휴업은 근기법에 따라 불법”

이성배 지회장은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고, 나이만 특정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며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46조 1항을 근거로 휴업을 시행한



경우, 이 휴업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지회는 사측의 일방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여행제한 조치로 일감이 사라진 사천지역 항공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최진영 노조 경남지부 아스트지회장은 “지금 당장 여객기가 날아다니지 않으니 수익이 없고, 물량이 없다. 항공업계는 종말론이 닥친 상황이라고 한다”라며 “그나마 금속노조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휴업에 들어갔지만,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와 무급휴업에 내몰렸다”라고 설명했다.

아스트지회에 따르면 사천항공산단 49개 업체, 1만2천여 명의 항공부품업체 노동자 중 6천여 명의 노동자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사천항공산단 노동자 생계위협 받아

최진영 지회장은 “항공부품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5월 25일 기자회견을 연다”라며, 정부에 ▲항공부품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사천시 지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중형조선소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한국 조선산업의 허리가 꺾이고 있다”라며 “중형조선업의 위기는 관련 기자재 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금속노조는 대형조선사만 살아남아도 산업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욱 지부장은 “두산중공업, STX조선 등 구조조정 칼날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힘겹게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지역과 한국 사회로 연대를 확장해낸다면 노동자를 지키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엄교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 격려사를 통해 “5월 20일 22년 만에 노·사·정회의가 열렸지만, 예상과 같았다”라며 “고용안정과 사회보장 대책을 논의하자는데 자본의 대표는 노동유연화를 우선 요구한다”라고 비판했다.

엄교수 부위원장은 “노동자에게 고용은 목숨과 같다”라며 “함께 투쟁을 조직하고 함께 싸우자”라고 호소했다.